

뉴스레터(KPSA2021-9호)

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(안) 주요내용

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·플랫폼 운영자에게 위해제품의 유통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(전부개정, '21.3.5~4.14)

* 전자상거래법 : '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'

1. 개정안 개요

- **(전면개편)**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판매·플랫폼운영사업자로 구분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면개편 (통신판매 중심→전자상거래 중심)
 - * 제1장(총칙), 제2장(전자상거래-①온라인판매사업자, ②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) 제3장(소비자권익보호), 제4장(조사·감독), 제5장(시정조치·과징금부과), 제6장(보칙), 제7장(벌칙)
- **(신설내용)** 비대면시대에 대응하여 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,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 및 구제 등 소비자피해 방지 장치 확충

<주요 신설 내용>

▲위해물품 온라인 유통 차단, ▲중개거래·직매입 구분, ▲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
▲국외 행위도 법 적용대상, ▲국내 대리인지정, ▲검색·노출순위 결정기준 표시,
▲이용후기 수집·처리 공개, ▲분쟁조정위 설치, ▲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,
▲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, ▲배달앱 사업자·이용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

2. 국가기술표준원 관련 사항

- **(리콜의무)** 온라인 판매사,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리콜 등의 위해물품 발생 시 회수·수거·폐기 또는 판매 중지 등 조치 의무화(안 20조, 30조)
 - *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(공정위는 제품안전기본법 등 18개 법률 검토 중)
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리콜관련 정보공개, 거래중단 등 기술적 조치 명령 가능
 - * 현재 통신판매업자가 96만개에 달하여 공정위는 대상사업자를 별도로 고시 예정
- **(이행력 확보)** 위반 시, 공정위는 시정권고(안 58조), 시정조치·영업정지(안 59조), 과징금(안 65조), 벌칙(안 75조), 양벌규정(안 79조), 과태료(안 80조) 등 조치

3. 향후계획

- 안전국, 제품안전관리원·협회 등의 개정안 의견 수렴(~ 3.19)
- 필요시 불분명한 벌칙조문 등 개정의견 전달(~ 4.14)

○ 접수 및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한국제품안전협회 신동인 과장 / 전 화 : 070-4010-7694
E-mail : dis@ksafety.kr

※ 법 개정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